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의미와 개념 및 실체, 그리고 정부정책방향에 관한 담론적 접근*

위 평 량**

논 문 초 록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대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제시함으로써 역대 정부와 가장 큰 차별성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째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정립시켜야 한다. 철학과 이론 등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없다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운 정책의 접목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그간 한국경제를 지배해 온 경제적 이념을 극복하고 제3의 이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계층 간의 임금격차 해소이며 이 목표는 또한 경제의 이중구조해소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집행은 영역별 및 요소별 정부의 개입 수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강력한 이익단체와 정치집단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핵심 주제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혁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A1, L0

투고 일자: 2019. 1. 25. 심사 및 수정 일자: 2019. 3. 5. 게재 확정 일자: 2019. 4. 30.

* 이 논문은 위평량, 2018,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의미와 개념 및 실체 그리고 정부역할에 대한 고찰”, 중소기업연구원 (2018. 11.)의 주요부분을 발췌·요약하였고, 한국경제학회·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 실현 방안과 과제’ 발제문 (2018. 12. 17.)을 취합해 재작성 되었음을 밝힌다. 귀한 심사평을 주신 두 분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리며, 나머지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라는 점도 밝힌다.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e-mail: wiwe61@hanmail.net

I. 서론

문재인정부의 중소기업에 관한 시각과 대강의 정책은 2017년 ‘대선공약집’과 ‘100대 국정과제’에 나타나 있다. 즉 ‘대기업 중심 경제의 대안으로서 중소기업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만들어갈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주요정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 벤처 등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 한국형히든챔피언육성, 인력난해소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해소, 소상공자영업자의 역량강화를 제시하였다(정책기획위, 2017).

매 5년 마다 반복되는 것과 같아 보이지만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경제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천명한 것과 함께 ‘대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 해소’를¹⁾ 위한 제도개혁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집권 후 구체적 정책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승격해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등 현재까지는 공약의 일부를 지켜가고 있다. 또한 공정경제(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자영업자(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함)가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그리고 대자본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제도개선 외에도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하고 협력이익공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정책은 그 내용의 깊이와 범위는 다르지만 2012년 대선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익숙한 용어이지만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공약은 절대다수 일반인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새롭게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사업자 가운데에서도 사업만 잘되면 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선거 때만 되면 정치적 수사로 반복되어 왔다는 경험으로부터 사업자조차도 중소기업 중심 중심경제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또한 경제학계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심이 더 깊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온 대신 실체가 모호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라는 정치권의 공약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 보다 구체적인 임금격차 완화정책으로는 기업 내 공정임금(공정임금법제정, 임금격차현황보고 등)달성, 원-하청관계 공정임금(성과공유제확산, 하도급 임금분리명시제 도입, 중소기업 연합 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 달성, 전 산업공정임금(산업별노사정대화 틀 구축, 산업별표준임금체계마련 등) 체계구축 등이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일반정책이 주되게 구성된 가운데 당위성 차원의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달성이라는 정책 틀 중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즉 거대한 경제구조전환 작업일 수밖에 없는 이 전략은 사전적 또는 동시에 동 전략에 대한 타당성분석은 차치하더라도 이전 경제구조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가운데 그 대안 체제가 자연스럽게 부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간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이하에서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라 함)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제Ⅲ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대안적 체제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했다는 점에서 현 시점은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된 성장방법론을 둘러싼 주류경제학자와 비주류경제학자 간의 이론적 갑론을박보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론과 관련된 갑론을박이 더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란 무엇이고 그 실체는 무엇이며 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요구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타당한지, 동시에 이와 같은 요구가 이미 정책화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제대로 추진되어 가는지, 나아가 이른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공과(功過)는 무엇이고 과를 어떻게 보완해야만 지속가능한 한국경제가 구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학계의 전반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진정한 목적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와 관련된 학계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경제의 강건한 구조구축을 추구함에 있다.

이 글은 제Ⅱ장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제Ⅲ장에서는 학계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Ⅳ장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그 실체는 무엇이어야 하는 가를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정부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요구와 필요성

1. 중소기업 등의 현장실태

“노동자가 자부심 갖고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에 취업자가 몰려드는 것이다.”, “소상공업자들이 편하게 장사하는

것이다.”, “사업 잘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인들이 사업에만 열중하게 하는 환경이다.”, “중소기업 인이 사회에서 대우 받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갑이 되는 세상이다.”, “재벌대기업의 갑질 없는 환경이다.”, “재벌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등 중소기업 등의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제·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많은 원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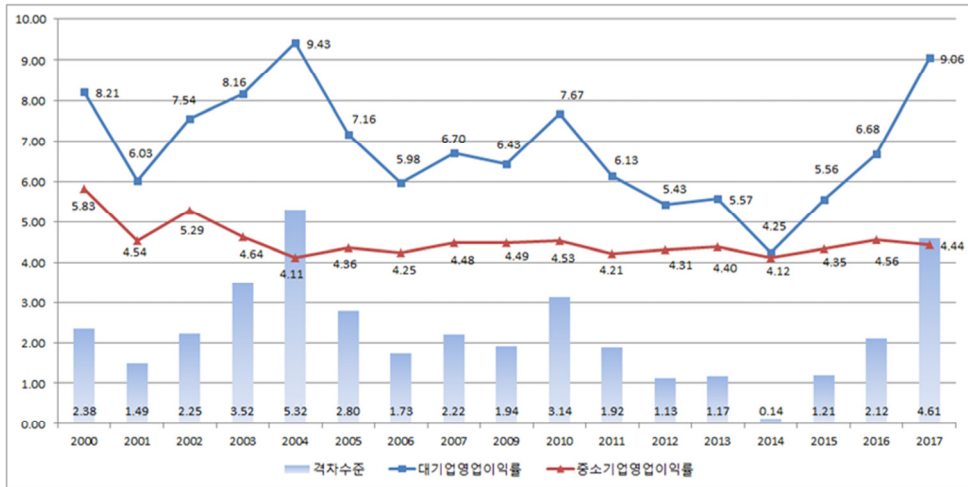
예컨대 십 수 년 간 납품단가가 인상되지 않은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실제로 2005년과 2017년의 성수동 수제화 장인의 납품단가가 동일하고 2010년과 2017년의 특정 전자제품 부품납품단가가 같다는 사례가 언론에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다.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부품원자재가격 상승은 지속되는 반면 납품 가격은 10년째 변화가 없다면 어느 중소기업도 사업을 지속할 수 없으며, 또한 국가적으로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다. 낮은 단가 대신 더 많은 물량을 보전하는 방식은 사업자에게는 일용불만을 잠재울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없으며 장시간의 노동을 초래하고 높은 산업재해빈도, 노동자 건강, 여가, 자기 계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양상의 근본원인은 해당분야의 혁신과 경쟁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구조와 관행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혁신의 성과가 대기업원사업자에게 귀착되는 구조이다. 하도급(협력)기업의 기술개발이나 공정의 혁신 성과가 그 주체인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가인하로 연결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이익은 커지고 중소기업의 혁신유인은 제거되기 일췌이다. 또한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위해 골목시장을 초토화시키기도 하였다. 즉 대기업은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자영업자가 종사하는 골목시장, 빵집, 순대 및 떡볶이 사업까지 진출해 경제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 남양유업사태로 대표되는 각 영역과 각 단위에서의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이른바 ‘갑질’은 사회 저변의 구조적 문제로 뿌리를 틀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지표를 검토해 보자. 전통적 관점에서의 생산성과 수익성은 대기업이 항상 우월하다. 그러나 생산성비교는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생산성 등)을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대 중소기업간 자본장비율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외에도 부가가치율과 총자본투자효율 등도 함께 비교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2009년~2015년 두 집단 간의 평균적인 부가가치율은 23.60% vs. 19.66%이고 총자본투자효율은 26.45% vs.

17.63%로서(중소기업위상지표, 2017) 중소기업군이 항상적으로 높게 측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대표지표인 매출액 영업 이익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군이 항상적으로 낮다.

〈그림 1〉 대·중기업군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추세와 격차양상(단위: %)



Raw Data: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그림 1〉의 전체 특징은 중소기업의 이익률 수준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반면 대기업의 그것은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크다. 이는 중소기업군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대신 대기업군의 숫자는 극소수라는 점에서 전체 경기변동 또는 산업별경기변화에 따라 대기업의 이익률이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소수 대기업군의 연구개발 규모와 역량 및 경영혁신 등의 다양한 결과에 따른 양상으로 볼 수 있는 한편, 한국의 일부 대기업은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이익률이 평균이익률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무튼 대기업군의 영업 이익률은 중소기업군의 그것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소기업군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1인당 생산성의 열위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긴 하지만 이외에도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이유도 없지 않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는 제외하고 전체 구간을 둘로 나누어 보자. 먼저 2000~2007년 대기업의 평균 이익률 수준이 7.40%이고 중소기업 평균 4.69%로서 격차수준은 평균 2.71%p이고 2009~2017년 구간2는 대기업 평균 이익률

수준이 6.31%, 중소기업 평균은 4.38%로서 그 격차수준은 평균 1.93%p이다. 전 체기간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업 이익률은 평균적으로 하락하고 대중소기업간 격차 수준도 이전 구간은 2.71%p였으나 이후 구간에서는 1.93%p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중소기업군 보다는 대기업군의 영업이익률 수준에 따라 격차 크기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대기업군의 성공여부가 중소기업의 성공여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의 하나로는 생산 구조의 수직계열화 및 전속거래구조로 특징되는 하도급거래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한국 주력산업에 집중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호 간의 종속 관계 및 중소기업군의 경쟁심화 가속화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총합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의한 결과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일부 선진국을 보면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대기업보다 높아 2001년~2004년 평균 7.6% vs. 5.8% 수준이며 미국의 경우도 7.33% vs. 8.60% 수준으로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위평량, 2018).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률 수준의 격차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국민경제 지표

우리나라 전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등 사업체 비중은 99.9%(소상공업자 85.6%)이며 종사자 수는 90.2%(소상공업자 36.2%)이고 이들의 매출 비중은 46.4%이다. (통계청 2015, 경제총조사). 선진 주요 국가인 미국은 99.9%-49.4%-38.3%이고 일본은 95.6%-71.6%-40.3%이며 독일은 99.7%-79.4%-36.9%이고 영국은 99.9%-59.8%-49.0%이며 이탈리아는 99.9%-81.8%-69.0%인 것으로 확인된다. 즉 우리와 선진 주요국에서 나타난 중소기업 등의 외형상 특징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중소기업 영역에 대한 정부정책은 많지 않고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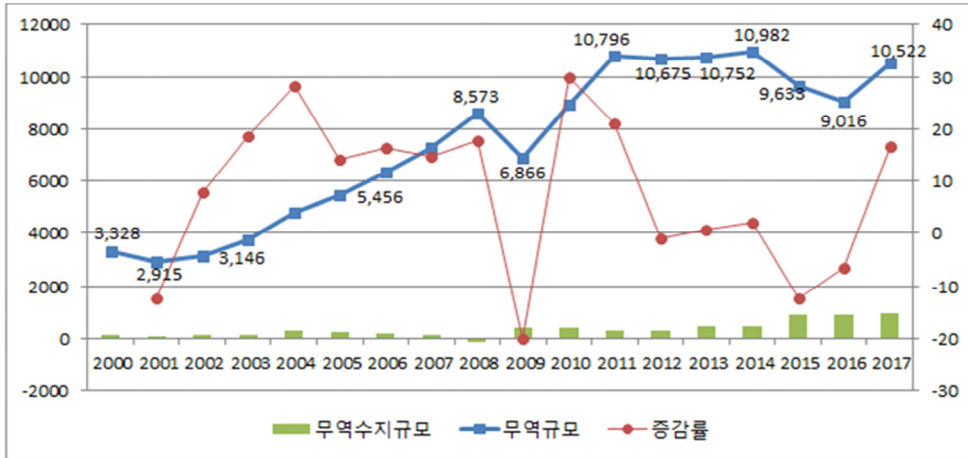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여건악화와 함께 특히 2000년 이후 장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차원에서 볼 때 2012년부터 저성장국면에 진입해 이른바 L자형 트랩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로써 한국경제를 견인해 온 대기업수출주도형 체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른바 낙수효과 성장론의 약효 상실론이다. 여기서는 국민경제 주요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001~2016년 기간 실질 GDP성장률은 3.89% 수준이지만 2012~2016년 성장률은 2.85%로서 한 단계 하락했다. 경제역동성과 잠재성장률 등과 관련된 국내총투자율은 같은 기간 평균 31.24%이고 총투자율은 29.46%로 한 단계 낮아졌고 특히 2012~2016년 기간은 글로벌금융위기 시점보다 더 낮다. 또한 경제활동별 생산 자본스톡 증가율은 2001년 이후 2014년까지 장기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3%대 중반으로서 그 이전시기에 비해 역시 한 단계 하락했다. 반면 2001~2016년 동안 기업저축률은 평균 18.84%이며 가계 등 저축률은 6.32% 수준인 가운데 2012~2016년 기간 기업저축률은 20.52%이고 가계는 7.08%로 각각 한 단계 상승했다. 이처럼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투자율과 자본스톡 수준 등 기타 통계들을 검토하면 2012~2016년 기간에 하락했고 기업저축과 가계저축률이 한 단계 상승했다. 기업저축의 역설 현상에 따른 경제역동성저하와 부동산주택 규제완화정책과 관련된 가계저축률 상승은 소비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7~2018년 최근 경제성 결과가 악화된 배경은 결국 누적된 경제운영과 그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상황을 제외하고 좀 더 주목해야 할 세부적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위평량, 2018).

먼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데이터를 보면 2008~2016년 명목기준 전 산업 매출규모는 증가했으나 실질매출 증가율은 평균 3.20%이며 2012~2016년 연평균 0.9% 수준에 그쳤다. 이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해 보면 2008~2016년 제조업 매출증가율은 평균 1.82%, 비제조업은 4.47%이지만 2012~2016년 제조업 실질증가율은 (-)1.53% 추정되고 있다. 이를 다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보면 2012~2016년 제조분야 대기업 실질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2.92%로 나타난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나라 제조업분야와 대기업분야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통계는 <그림 2>의 무역통계이다. 무역통계상 경상수지는 흑자구조에 있으나 2001~2017년 달러기준 수출입을 포함한 무역총액 증가율은 연평균 7.99%인 가운데 2012~2017년 증가율은 (-)0.04%에 불과하다. <그림 2>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면 매우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나 여기서 한두 가지 만 살펴보자. 먼저 한국의 대외거래규모가 2011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외거래의 절대규모 증가현상을 그림에서 보면 ‘빠르게 달리던 자전거가 2011년부터 급제동이 걸렸고, 넘어진 이후 다시 출발’하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다.

〈그림 2〉 우리나라 무역규모 및 증감률(단위: 억 달러, %)



Raw Data: 한국무역협회, 2018.

한국은 개방경제에 수출주도형이다. 대외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의 대외거래가 이처럼 몇 년간 정체내지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고 최근 한국의 저성장과 연동해 볼 때 필요가 있다. 어떠한 배경에서 갑자기 대외교역규모가 제자리걸음 내지 축소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주력산업과 제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처럼 대외교역규모가 정체 내지 축소되었다는 사실, 기업실질매출의 정체 및 제조업분야와 특히 대기업의 역할 축소 등과 같은 사실은 부각되지 않은 채 2017년과 2018년 저성장과 일자리 감소 등의 원인을 오로지 소득주도 성장론 때문이라는 정치 논리에 편승하지 않았는지 회고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출무역집중도는 전체 수출의 23.4%가 5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상위 50대기업이 60.4%, 100대기업이 66.7%, 상위 500대기업이 78.9%를 각각 점유하고(관세청, 2015) 있다는 점에서 역시 대기업 중심의 수출이 아닌 수출기업의 다변화도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²⁾

이상을 종합해 보면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은 제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약화와 함께 산업의 fundamental 취약 및 대기업역할의 한계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중소기업

2) 재벌그룹과 대기업군의 경쟁력집중 양상은 위평량, 2018, “재벌로의 경쟁력집중 : 그 동태적 변화와 시사점” 및 “한국 500대기업의 동태적 변화분석과 시사점(1998-2017)” 등을 참조하라. 여기에서의 시사점은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한국경제의 문제라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의 경쟁력 없음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따라서 현재의 산업구조 및 경제구조의 한계에서 벗어나 산업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중심경제를 강화하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 할 수 있다. 즉, 이윤주도론 대 소득주도라는 성장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접근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주력 자를 그간의 대기업 군에서 중소기업군 등으로 설정하는 전략을 세우는 이른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에 비로소 국내 학계에서 실증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조덕상(2018)은 경제성장률감소 요인으로 노동(인구구조변화와 노동공급감소), 자본(규제성장 경로 진입에 따른 자본축적 속도의 감소), 생산성 급격한 하락 배경을 자원배분의 효율성 감소 또는 기술발전 정체로 놓고 분석을 시도했다. 거시경제 생산성 증가율 하락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총생산 증가율을 분해하고 자원배분효율성하락이 주요인이며 기업집단회사의 하락 기여가 높고 산업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즉, 독립기업과 기업집단의 자원배분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재벌그룹의 효율성 악화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영삼(2018)은 낙수효과를 검증하고 낙수효과는 소멸중이며 따라서 새로운 체제 대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중소기업 매출액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2007년 이후)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의 분업생산구조(하도급체제)에서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단가인하요구에 의해 상쇄되고 있는 것은 물론 대기업체제 아래서의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체제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종합적으로 대기업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Ⅲ.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그간 한국경제, 특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점에 대한 논의와 세부적인 개선 또는 개혁 방향 제시는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논의는 찾아보기 쉽지 않고 이러한 요구가 강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³⁾ 따라서 실체가 모호한 ‘중

3)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정부나 학계 등에서 본격화 된 것은 비교적 최

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란 무엇인가에 대한 학술적 정의와 개념을 찾기란 쉽지 않다.

김광희·홍순영외(1998)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란 전문성, 유연성, 기민성 그리고 창의성을 지닌 중소기업이 부가가치, 생산량, 고용 등의 면에서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산업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의 성격도 규명하고 있다. 우선 양적인 개념인 동시에 질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는 부가가치, 생산량, 고용 등의 산업의 양(量)적성과를 나타내는 개념인 동시에 기술개발, 경영선진화 등의 산업의 질(質)적성과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둘째, 정(靜)적 개념이 아니라 동(動)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양적으로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현실안주 등의 이유로 산업의 동태적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는 산업구조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세 번째로는 산업전체는 물론 개별기업의 속성을 나타내는 개념을 제시한다. 기업이 유연성, 창의성 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내부의 관료적 병폐의 제거, 생산체제의 정비 등 기업내부요인의 조정이 있어야 하므로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는 개별기업의 속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중소기업의 속성과 산업의 속성을 감안한 매우 포괄적이고 대표적이며 가장 고전적인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박승찬 외(2001)는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바 있다. 즉, 중소기업이 생산과 고용 등에서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기술의 개발, 지식의 축적, 부단한 경영혁신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도하는 경제구조를 뜻한다. 즉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산업을 이끌어가고 국민경제의 질적, 양적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경제를 지칭한다.

홍태희(2004)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고실업의 문제는 시장집중 등 독과점적인 시장구조가 한국경제의 지배적 경향이며 산업적으로 과잉생산·과잉설비 상태, 즉 구조적 과잉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축적의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

근의 일로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소명으로 제시된 시기와 유사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2012년 당선직후 '새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한바 있었으나 기존정책과 차별성은 없었다.

심 경제구조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저성장과 고실업의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소기업을 인지하고 산업구조와 경제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라 하였다.

오동윤 외(2012)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후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즉, 경영환경의 위축과 낙수효과의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성장의 한계와 그리고 대중소기업간의 격차확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고령화와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등의 문제가 한국의 새로운 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인력(10), 기술·R&D(11), 판로·유통(7), 소상공인(10), 창업·벤처(18), 수출·글로벌화(9), 금융(5), 정책지원체계 분야(4) 등 모두 8개 영역에 대한 67개 정책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그간의 여타 보고서와는 달리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그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표방하거나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2015)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제시한다.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폐해로 예시한 내용은 크게 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임금의 격차, 수출과 금융의 격차, 인재의 편중, 성장과 수출의 정체, 산업 활력의 저하, 갈등사회 심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 준비된 창업과 부단한 혁신경영을 통해 원활한 기업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중소기업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제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위평량(2016)은 한국의 불균형성장 전략과 수출주도 전략에 따른 재벌대기업 중심의 역대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력집중을 초래한 가운데 현재의 대중소기업이라는 경제의 이중 구조적 상황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내용적으로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란 양적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이지만, 질적 측면에서 보면 그 반대라는 점을 적시하고 양적 측면이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이 질적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йд된 경제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현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이루어지는 상태로 규정 하였다. 한국에서의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하여 중소기업 강국의 각종 지표를 제시하고 단계적 실천목표치를 제시하는 한편, 각각의 목표치 달성을 위한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백필규(2016)는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상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다양한 문

제를 나타내는 원인을 중소기업자체요인(준비 안 된 생계형단독창업과 혁신능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문제)과 시장구조요인(하도급거래구조 심화와 재벌대기업의 횡포 및 불공정거래 등), 그리고 정책요인(창업지원, 성장지원정책의 미비와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구분한 다음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정의와 개념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란 공정한 경쟁 환경 아래에서 준비된 창업과 부단한 혁신경영을 통해 원활한 기업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창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과 노동자간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정의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실현방안으로서 창업지원, 혁신경영지원, 공정거래확립 지원, 동반성장지원, 교량단체의 역할 지원, 정책추진기구의 재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극소수의 선행연구들은 그간 정부가 구사해온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동시에 그 배경에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경제와 산업에서의 중추적 역할자로서의 중소기업, 시대적저성장과 고실업을 해소하는 당위로서의 중소기업, 공정한 경쟁시스템의 구축과 균형발전, 이중구조 극복과 질적 경쟁력확보, 창업과 혁신, 동반성장이 선순환 되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라 하고 있다. 구조적 과잉축적해소, 즉 재벌의 억제를 통해 중소기업업을 도모하거나 대중소기업 간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그 실체로 보는 연구도 있으나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논의의 결과이다. 반면 선행연구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영으로 문제해결에 집중된 측면이 강해 국내 중소기업 활성화와 존속에 필요한 철학적 배경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⁴⁾ 나아가 중소기업 성장론에 대한 논의도 미흡하고, 무엇보다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으나 이 경우 사업자와 노동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 등에 대한 논의를 찾아 볼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오랜 기간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과 이 체제에 대한 비판은 강도 높게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펴본 바와 같이 대안적인 체제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가 문제의 근원이라면 그 대안적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이처럼 학계의 연구결과물만 놓고 본다면 대체로 현재의 대기업 체제를 인정한 가운데 미시적 변화를 통해 중소기

4) 이와 관련된 논의는 필자의 2018,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의미와 개념 및 실체 그리고 정부역할에 대한 고찰”,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경제실현방안』, 중소기업연구원을 참조해도 좋을 것이다.

업 등의 생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미시적인 행위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성과(performance) 극대화를 위해 현장의 부정의하고 공정하지 못한 관행과 행태(behavior)를 개혁함으로써 그 결과가 축적되어 궁극적으로 구조(structure) 개혁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매우 장기적이고 또한 변화무쌍한 정치·경제·사회변화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정책노선일 것이다.

물론 강력한 시스템 개혁이라 할지라도 재벌체제 경제구조를 조기에 변화시키기는 한계가 있으며, 본고에서도 그간의 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개혁주의자들도 인식한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개혁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경제민주주의는 전제적(專制的) 의사 결정이 아닌 모든 경제주체 및 민주 국가가 참여하여 민주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모든 경제 구조와 절차의 총괄이며 한 두 번의 전면적·혁명적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혼합경제의 원리에 따라 제한적이고 차별화된 개혁 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F. Vilmar, 1999). 이처럼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혁명적 시도 또한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결국 경제구조 전환 방법론은 합리성과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한 정책 프로세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독일의 사례는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에 근거한 사회적 시장경제의 완성적 회고라는 점에서 그들의 개혁과제와 그 지난(至難)한 과정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크게 보면 혼합경제체제에서의 대안 찾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대기업경제체제를 대체하거나 보완적 체제는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그간의 많은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업 등의 여건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고, 종래 구사해 온 전략과 정책효과가 제한적이라 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한 시도는 불가피하며 합리적인 사고이다. 또한 우리는 그간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재벌개혁'에 힘을 쏟아 수많은 관련 법제도 개혁안을 다루어 온바 있다. 이 흐름과 비교해 여기서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중소기업 등'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비교적 차별적이다.

Ⅳ.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의미와 개념

1.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의미와 개념

본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정리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등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시대와 국가에 따라 상대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의 발전경로와 특성을 감안해 재정리함으로써 단기 및 중장기적 정책 마련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의 한국경제 실상을 근거로 미래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래의 패러다임에 머물기보다는 새로운 성장 또는 발전 전략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위한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시점의 한국경제 상황과 위기는 모두 종래의 이론적 기반위에 수립된 정책의 결과라는 점이고 따라서 현시점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종래의 이론과 정책의 미시적 변화를 넘어 과감하다할 정도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 역시 보다 과감한 선택으로서의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위평량, 2018).⁵⁾

우선,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라는 개념적 의미는 기업(또는 사업체) 보다는 사람(또는 노동자)을 정책의 중심에 두면서 현시되고 있는 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로부터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 및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진행되는 산업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화와 AI(Artificial Intelligence)화 등 이른바 경제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추세변화를 수용하여 한국경제가 동태적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에서의 이념적 또는 사상적 모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현존하는 제3의 길 모두를 근거로 각각의 장점을 재해석·흡수하는 동시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 예컨대 케인즈가 자본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과감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과감한 정부개입을 주도한 바와 같아야 한다. 또한 영국의 블레어와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미국식 시장주의도,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의 노선도 아닌 신노선(제3의 길)을 택한 것과도 같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또한 종래의 틀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개인, 기업, 정부 등)가 한국적 신노선을 새로운 이념으로 수용하여 헌법적 가치, 즉 기회평등과 참여,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작동되는 경제사회구조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의 실질적 발전은 경제 내적 보이지 않은 손에 방임할 경우보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동시에 작동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인 인간존엄과 개인의 자유, 다수의 행복극대화를 위한 민주주의가 확보되어야 하

5) 이하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철학적 배경 등은, 필자의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의미와 개념 및 실제 그리고 정부역할에 대한 고찰”의 원문을 참조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민주적시민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은 명시적으로 기업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구사한 점을 반성함으로써 현 시점부터는 사람과 노동자를 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제3의 길이란 일반적으로 현 시점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두 체제에 있어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시키는 방법론을 통해서 달성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시장경제체제가 본류라는 점에서 시장경제 단점을 극소화하고 그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체제와 중소기업 등의 체제에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광의의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 및 민주적시민이 한국공동체의 공영을 뚜렷한 목표로 삼아 국내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등이 글로벌 차원의 변화를 흡수·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스스로가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적시장경제로 정의하고자 한다.

서술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는 그 내부의 사람을 위해 작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간의 구조와 제도 및 기업과 사업체 중심에서 인본주의에 입각한 사람중심의 정책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 져야한다. 신개념 한국적시장경제란⁶⁾ 먼저, 추구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또한 시장경제시스템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공동체 공영이 합의될 경우 사상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을 넘어 또 다른 주의(-ism)를 수용하는 열린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이에 근거하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의 내재적 문제, 예컨대 불평등과 양극화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움켜쥔 부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람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것을 극복함으로써 인간 개체의 평등함을 달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6) 한국적이라는 의미는 우선 경제발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따라 현시점에서 본 각국의 문화와 제도와 관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각국의 경제 관련 법제도 가운데 우리가 매우 특이한 형태를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예컨대 시장경제체제라 하여도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등이 발달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고 동시에 동 제도가 활성화 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모두 발전의 경로의존성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적이라는 의미는 우리경제의 재벌체제가 세계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상징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서 한국만의 수단을 동원해 합의된 시장경제시스템을 마련하고자하는 의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대기업체제의 단점을 대폭 보완하고 중소기업 등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 또한 현 시점, 한국의 성장론적 관점에서 다른 주의(-ism)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는 자유방임적 태도보다는 합리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것이며 이때 과거와 같은 정부에 의한 관리(control) 차원을 넘어 집단지성의 관여(engagement)가 같은 무게로 개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속한 사람들의 창조성과 그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대내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시에 글로벌 변화와 공행(共行)하는 한국경제가 자체적으로 동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역사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장기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고 동시에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혁명에 의한 과학계와 미래학과 사회학 및 경제학과 경영학 등에서 예시하는 공유경제와 AI시대를 수용한 가운데 중소기업 등이 주도하는 시장을 한국적 신개념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아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로부터 비롯된 문제점을 안고 간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는 동시에,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외면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내용의 상충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2.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체

중소기업 중심 구조는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인가 또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체는 무엇인가. 99.9%의 중소기업 사업자와 90%의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고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AI시대 등을 맞이하여 한국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핵심 아젠다(agenda)가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 관련 사업자 및 노동자 등의 반응과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라는 실체에 다가서기는 쉽지 않고 매우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 즉자적으로는 사업 잘되는 중소기업, 불공정해소와 공정경쟁, 용이한 동반성장, 부가가치, 생산량, 고용 등에서 산업의 중추적 역할, 산업구조 고도화 주도, 과잉축적해소, 부단한 혁신경영, 원활한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 등이다. 이들 모두 타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고 동시에 시도되어야 하는 방향일 것이다.

사실 그간의 각종 중소기업 정책은 모두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대규모 예산투입

과 함께 구사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하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와 같은 수많은 정책을 구사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크게 결여되었다는 판단이다. 대부분의 정책과 연구들이 단순히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등과 같은 관성적 정책구사에 머물러 중소기업 등을 위한 관련 정책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체는 관련자들의 충분한 수입(income) 획득(돈벌이)에 있고 현시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해소로 본다. 다시 말하면 정책의 궁극은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사업자와 노동자가 충분한 수입을 획득하는 것에 있다. 여기서 가격(임금)기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상대임금이 높을 경우 그에 걸 맞는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동시에 전반적인 임금수준의 상승은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등의 영역에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 물론 생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서론에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성은 또 다른 문제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최악의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임금상승 정책 목표와 관련 정책은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간의 정책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노동자와 임금수준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노동자에 대한 것은 노동조건과 노사관계 등에서 현재의 고용노동부가 별도의 정책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이 이들을 제외했다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소기업과 관련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전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정책은 커다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특히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와 공정경제 및 혁신성장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완화라는 과제가 가장 상위에 두어져야 하며 ‘대중소기업간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목표가⁷⁾ 최우선 정책이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달리 표현하면 이중경제구조의 해소로 도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의 이중구조를 문제 삼는 것은 경제력집중의 다양한 폐해 이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기술력 격차 등 매우 다양한 격차와⁸⁾ 불합리한 사

7) 동반성장위원회는 2018년 핵심 업무의 하나로써 이 목표를 채택해 지원해 오고 있다.

8)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1인당부가가치생산성 및 노동생산성은 자본집약적인 대기업이 우월하고 부가가치율 및 설비투자효율성 지표에서 중소기업이 평균적으로 우

회적 대우 등이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격차에 있다. 기업과 기업, 그리고 기업규모 사이, 나아가 업종 및 산업별로 내재된 생산성 격차로부터 비롯된 수익성의 차이, 이로부터 비롯된 노동자의 임금격차 발생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격차의 수준이며 특히 우리의 경우 격차추세의 악화이다. 이러한 추세의 악화는 ICT화 진전의 결과와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AI 및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고 대부분의 생산과정을 로봇이 담당하는⁹⁾ 이른바 노동 없는 사회로의 진전을 가정한다면 현 시점에 있어서 임금격차 해소는 매우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정당하고 적절한 임금 취득은 경제·사회적으로도 필수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결과는 임금 등이다. 노동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일한 시간과 동일 영역, 동일 작업에 대한 임금격차는 이론적으로 동일한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 집단의 임금격차의 최소화가 중요하며 우리의 경우 임금격차해소는 시장 자율적 기능이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가 제도적·체계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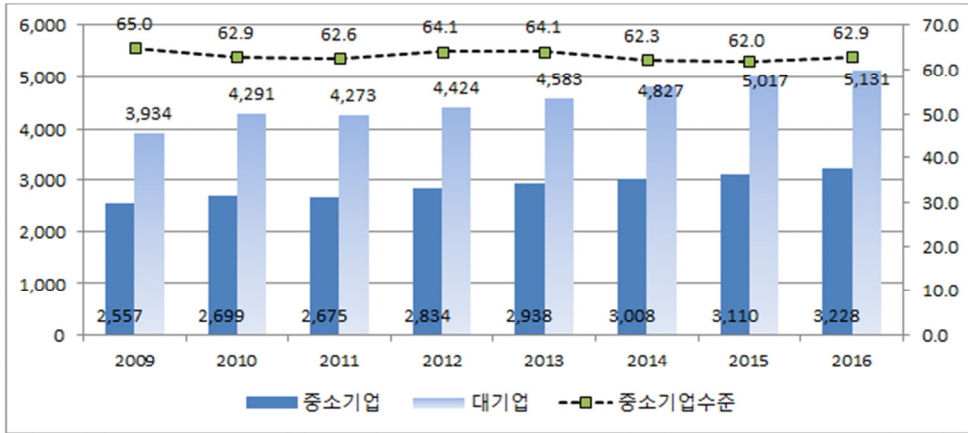
제시한 <그림 3>과 <그림 4>는 2009년 이후의 최근 연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평균임금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은 전 산업의 격차이고 <그림 4>는 제조업 내에서의 격차 추세이다.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할 때 2016년 현재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노동자(=100)의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대비해서도 낮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력 기간에 포함된 시점이나 2016년 시점이나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경향, 즉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나 두 집단 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회복되지 않고 악화되는 현실은 우리나라가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더욱 심하게 관측된다. 2009년 대기업 노동자를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수준이 59.7%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은 53.2%까지 하락한 이후 2016년 54.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참고로 1994년 전 산업 기준 대기업 노동자를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노동자는 76.7%였으며 제조업은 70.8% 수준이었다.

월하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이 우월하지만 대기업군은 그 변동 폭이 심한 반면 중소기업군은 안정적 양상을 보여준다(위평량,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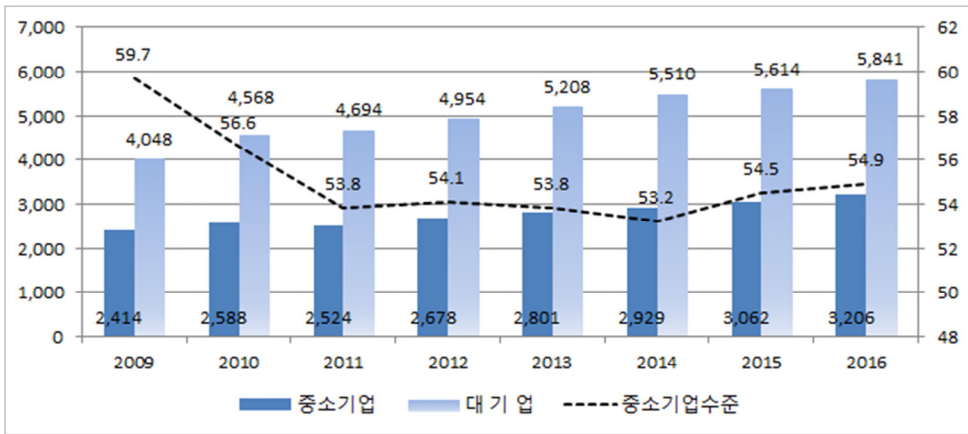
9) 2016년 한국의 로봇 밀도는 세계1위로 노동자(종업원, employees) 만 명당 631대이며 2위인 싱가포르 488대, 3위 독일 309대, 4위 일본 303대, 스웨덴 233대, 덴마크 211대, 미국189대, 이탈리아 185대, 벨기에 184대, 대만177대 등과 비교해 매우 높다. 국제로봇연맹(IFR), 2017 세계 로봇통계.

〈그림 3〉 전산업 대중소기업 노동자 임금격차추이(단위: 천원, %)



Raw Data: 중소기업위상지표, 2017.

〈그림 4〉 제조업 대중소기업 노동자 임금격차추이(단위: 천원, %)



Raw Data: 중소기업위상지표, 2017.

이 같은 사실은 그간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중소기업 정책이 노동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기업체 및 사업체 중심으로 펼쳐진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보완적 주체로만 인식한 결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그간 다양한 법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결과이자 유인구조의 핵심인 임금이 기업규모별 및 고용지위별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확대일로에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으로 그간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단순히 최저임금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합적인 정책혼합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서는 일본의 사례를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우선 2016년 기준 일본의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은 대기업 종사자의 79.98% (단순평균)이다.¹⁰⁾ 20년 장기불황을 겪은 이후의 호황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수준은 우리나라로서는 꿈같은 수준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일본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국가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전문가들 많지 않다.

역사적으로 선도 공업국인 일본 역시 중소기업과 하도급문제, 그리고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를 먼저 경험했다. 하도급 문제는 1930년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저가수주문제를 일으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기술향상, 그리고 숙련화에 장애로 인식된바 있다. 1940년대는 일본정부가 대중소기업간의 전속거래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하도급기업의 생산성 극대화에 대한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소기의 목적달성은 하지 못해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특히 전쟁물자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한 측면이 강하기도 하였으며 하도급기업의 기회주의적 행동 등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 달성에 실패하였고 이후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정책은 찾아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임금격차 해소 정책은 패전 후 다시 추진되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즉, 1945년 패전과 함께 일본은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및 과도 경제력집중 배제법(1947), 재벌 동족지배력 배제법(1948) 제정 등으로 재벌 해체가 이루어졌고, 대신 일본경제를 이끌어갈 대안적 주도자로서 결국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1948년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등 이후 약 10년 간 추진된 정책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보호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 특수 등에 의한 고도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즉 생산성, 임금, 기술, 자금조달 격차 등이 나타나는 한편 하도급대금 문제, 영세소상

10) 2016년 대졸 초임을 기준으로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우리처럼 평균을 낼 수 없으나 다음처럼 제시할 수 있다. 22세 208.2천 엔 vs. 215.3천 엔, 25세 230.3천 엔 vs. 246.4천 엔, 30세 270.3천 엔 vs. 317.3천 엔, 35세 305.0천 엔 vs. 391.1천 엔, 40세 348.5천 엔 vs. 464.4천 엔 45세 389.6천 엔 vs. 540.3천 엔, 50세 420.2천 엔 vs. 592.9천 엔, 55세 442.0천 엔 vs. 619.1천 엔, 60세 432.6천 엔 vs. 561.8천 엔. 단순평균 하면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노동자 임금의 약 79.98%이다. <https://ent.smt.docomo.ne.jp/article/800081>.

공인 보호문제 등에 직면한 일본은 이러한 문제들이 일본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구사하게 된다. 이 시기에 제정된 대표적인 법이 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1956), 백화점법(1956),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1956) 등이다.

이처럼 1948년 이후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강화하였으나 1957년에 이르러 대중소기업 노동자 임금격차가 78%대에서 50.3%까지 확대·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에 당국은 중소기업 육성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1959년부터 10년간 이른바 불리시정정책(不利是正政策)을 시행하게 된다. 이후 1969년 두 집단 간 임금격차가 다시 70.9%으로 개선되어 1970년 일본중소기업 백서는 대중소기업간 이중구조해소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불리시정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매우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의 개선을 이루었으나 주로 다음과 같은 전략과 기조로 요약된다. i) 시장질서 자체의 변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확고한 목적, ii)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구축, iii)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 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갖도록 법제도를 개선, iv) 각 산업별 대중소기업의 발전격차 해소정책을 구사, v)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비록 국가가 처한 여건과 시대와 그리고 글로벌 경제여건이 다르다할지라도 정부의 역량을 동원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최우선 목표를 대중소기업 노동자간 임금격차 완화로 삼아 실체적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에 참고삼아야 한다.

3.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진전을 위한 정부역할¹¹⁾

중소기업 등을 발전의 주력으로 삼고자하는 점에 대한 논의의 범위와 깊이는 일천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학계로 하여금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축적된 중소기업 등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연구하도록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즉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백가쟁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학계에서 학문적 검토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매우 정교한 정책적 틀을 가지고 중소기업 정책구사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11) 이 영역은 위평량, 2016을 재인용 보완하였음.

기업의 성장 및 발전에 있어서 기업규모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가장 전통적인 신고전과 경제학의 성장론이다. 즉, 규모의 경제에 기반을 두어 생산의 최적정규모기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규모의 최적화이론과, 신제도학파의 거래비용이론에 따라 기업 활동에 관한 모든 조직의 내외부거래에 있어서 최적 거래비용론에 따른 이익극대화에 적합한 규모를 추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도 적정한 기업규모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기업 자체역량(ability), 성장욕구(need), 기회(opportunity)를 기본 요소로 하고 이 요소에 대한 기업(최고경영자 및 종사자 등)이 충분히 인식할 때 효과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P. Davidsson, F. Delmar and J. Wiklund, 2006) 이론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는 기업을 관리하는 역량이라고 보고 이는 기업가적 판단과 조직적 역량이 중요하다는(Ghoshal, Sumantra, M. Hahn and P. Moran, 2002) 이론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성장에 관해서는 위 두 가지 관점을 결합한 중소기업 성장의 영향요소를 6가지로 제시한다(A. Perenyi, C. Selvarajah and S. Muthaly, 2008). 이들은 이 여섯 가지를 기업성장(발전) 요소로 보고 이를 내부요소와 외부요소로 구분하며 내부요소는 성장 동기와 성장의사 및 자원여부를, 외부요소로는 시장여건과 산업환경 및 자원여부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산업조직론 관점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성고가 높아지며 혁신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주장이 있고(Aldrich, H. and E. Auster, 1986), 이에 따라 대기업성장 유용론과, 대기업 보다 높은 유연성과 변화수용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혁신을 더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Hitt et al., 1990) 중소기업 성장 유용론으로 간단히 구분할 수 있다.

〈표 1〉은 이와 같이 국외 학계에서 제시된 중소기업 성장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결과와 정책범위를 참고삼고, 여기에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장요인과 애로요인과 관련된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핵심 정책요소를 포함시킨 중소기업 정책 틀이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측면을 감안하면 재벌대기업은 주어진 여건을 바꿔갈 수 있는 주체라 볼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 등은 주어진 구조에 적응하는 경제주체로서 내부요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는 있으나 외부구조를 개선하기는 매우 어렵다. 반면 정부는 이 같은 외부구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조개선과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내부의 미시 경영관리지표까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이다.

〈표 1〉 중소기업 정책 틀

| 구분 | 내부요인 | | | | 외부요인 | | |
|-------------------------|---|-----------------|------------------------|--|--|--|---|
| 기업 성장이론 | 효율성 획득과 극대화 : 경쟁, 규모의 경제 달성, X-efficiency 등 | | | | | | |
| 기업성장 6요소 | 성장 동기, 성장의사, 자원보유 | | | | | 시장여건 산업환경 자원보유 | |
| 성장촉진 및 성장으로 요인 | 기업가 정신 경영자 특성 정부정책 여부 | 연구개발 | | | 정부R&D | | |
| | | 인적자본(교육과 훈련) | | | 거 래 관 계 네 트 위 크 | 대 기 업 중 속 여 부 / 독 립 기 업 | 사 회 안 전 망 과 복 지 시 스 템 |
| | | 조직관리전략 | 인사노무 등 | | | | |
| | | | 계열 관계 등 | | | | |
| | | 마케팅전략 | 매출액 이익률 등 | | | | |
| | | 제품전략 | | | | | |
| | | 글로벌화전략 | | | | | |
| | | 재무전략 | 이자보상배율 금융비용 부채비율 | | | | |
| | | 자본화 정도 | 자본장비율 | | | | |
| | | | 순투자율 | | | | |
| | | 규모변수 | 평균노동자수 | | | | |
| | | | 자산 | | | | |
| 정부정책 수준 | 미시정책 간접지원정책 | 미시정책+직/간접+선별적정책 | | | | | |

자료: 위평량, 2014를 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은 민간에 대한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와 자율성 제약에 따른 효율성저하 문제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책영역과 과제에 대한 선별접근 또는 전면적 접근과 같은 전략적 기조 속에 구사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요소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기업 자체적 역량에 따른 과제는 기업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대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기업이 변경시킬 수 없는 외부의 구조개선 등은 정부역할이 집중되어야 한다. 또는 연구개발(R&D)과 같은 요소는 외부경제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분야와 아이템 및 시기에 따라 정부의 개입수준을 결정해 정책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시정책 및 간접정책에 속한 기업이 정신 고양은 정부가 지

원하거나 개입하기 쉽지 않다. 기업(사업) 하고자 하는 개인의 소명의식과 역량과 자질 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공적교육시스템 안에서 모험정신과 성공에 따른 인류 또는 국가에 대한 기여의 의미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내는 정도일 것이라는 점에서 간접지원이라 하겠다. 반면 시장구조의 개선과 불공정거래의 통제와 같은 것은 오로지 정부의 정책여부에 좌우되고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해당되므로 보편적이며 직접개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거시정책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책 틀은 매우 고전적이고 정통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주체의 다양한 요구와 함께 경기변동, 그리고 경제운영의 성과 등이 고려되고 특히 정치적 영향력이 가해짐으로써 정부가 스스로 정책의 영역한계를 설정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정부역할의 일관성이 상실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개입해야할 영역과 신중히 접근해야 할 영역 및 과제 등은 상시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민간과 정부역할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이는 중소기업 등의 정부의존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은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범주에서만 다루어져 온 바 크다. 이 같은 경향은 그 자체로서 이질적이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여건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편거시정책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을 포괄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중소기업 정책은 경제 및 산업정책 중심으로 구사하고 이 영역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복지정책영역으로 구분할 것을 강조해 왔다. 학문영역과 정부 각 부처 역할 관점에서 볼 때 그 근본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의 상호 의존성과 정책 대상의 이질성 등을 감안하고 복잡다기해진 현대사회의 융합화 등의 특성을 감안해 학문적으로도 영역을 넘나드는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정책도 역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도 경제 및 산업, 그리고 복지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정책혼합(policy mix)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취업자 대비 약 25.4%로서 다른 선진국보다 특별히 높은 점을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V. 결 론

이상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대안적 체제로서의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정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의미와 개념, 그리고 실제와 일본사례, 정부역할에 대해 논쟁적으로 제시하였다. 지난 50여 년간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최근의 한국경제를 분석하면 그간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가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대안적 또는 보완적 체제로서의 중소기업 경제구조 정착과 관련된 논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달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시급히 정립시켜야 한다. 철학과 이론 등에 대한 학술적 토대가 없다면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우선 정책의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제구조의 전환을 위해서는 그간 지배해 온 좌우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뛰어 넘는 제3의 이념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등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체(entity)이며 동시에 경제발전의 핵심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함을 제시하고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정책적 시계(time horizon)를 가져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 및 민주적시민이 한국공동체의 공영을 뚜렷한 목표로 삼아 국내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 등이 글로벌 차원의 변화를 흡수·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자체적으로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적시장경제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는 시장의 효율성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 관리(control)를 넘어 집단지성의 관여(engagement)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중심의 한국적시장경제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이며 이 목표는 이른바 경제의 이중구조해소의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임금격차 최소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매우 종합적인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 구사해야 하며 이 과정은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개선도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기업의 단순한 경영지표 개선 또는 임금인상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다섯째, 정부정책은 영역별 그리고 경영요소별 정부개입 수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이해상충집단과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시킨 가운데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정

책을 구사해야 한다. 미시적이고 간접적으로서의 정부정책과 거시적이고 직접적인 정부정책, 그리고 이를 혼합하는 정부정책의 구사를 통해 국민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 등의 정책은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범주에서만 다루어져 왔으나 이 같은 경향은 그 자체로서 이질적이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여건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편 거시정책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을 포괄한 정책혼합(policy mix)을 구사해야 한다.

이 논문은 사람과 중소기업을 정책의 중심에 두되 한국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을 확보 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면서 다소 추상적인 동시에 양립하기 어려운 도발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양상은 역대로부터 구사된 정책들이 반영되어 구축된 생태계라 볼 수 있고, 동시에 현재의 생태계가 불완전하고 또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 유지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 보다 더 진전된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 또한 당위일 것이다. 본고를 계기로 학계의 활발한 논란이 촉발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이고도 세부적인 전략과 과제 그리고 이론적 뒷받침은 다른 전문가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김광희 · 송장준 · 홍순영,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로의 개편방안』, 중소기업연구원, 1998.
2. 김종일,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중소기업』, 중소기업연구원, 2006.
3. 김성진 · 최수규 · 오기웅 · 박충찬, 『한국의 중소기업』, 매일경제신문사, 2004.
4.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문재인 정부, 2017대선공약 -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p. 102.
5. 박성택,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란 무엇인가 :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정책연구』, 가을호, 2016.
6. 박승찬 · 박종영, “디지털경제와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 중소기업연구원 리포트, 2001.
7. 박승록, “기업가 정신의 결정요인, 성과와 발현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8권, 제1호, 2016, pp. 237-260.
8. 백필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정책연구』, 가을호, 2016.
9. 오동윤 · 백필규 · 김익성 · 김주미 · 홍운선 · 남윤형 · 표한영 · 홍성철 · 한국공공행정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육성전략 수립』, 중소기업연구원, 2012.
10. 이규억, 『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990.
11. 이경의, 『중소기업, 왜 중요한가 - 산업체제의 전환과 중소기업 정책과제』, 지식산업사, 2017.
12. 위평량 · 김윤환, 『21세기로 가는 사회경제사상』, 대명출판사, 2007.
13. 위평량, “하도급거래 구조 특성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 『기업지배구조연구』, 제35권, 2010, pp. 55-74.

14. _____, “출자총액제한제도 제도입에 대한 실효성 분석,” 『기업지배구조연구』, 제42권, 2012, pp. 3-20.
15. _____, “대기업과 중소기업(하도급기업 및 일반 독립 중소기업) 간의 경영격차 분석과 시사점,” 『기업지배구조연구』, 제42권, 2012, pp. 21-42.
16. _____, 『성장사다리토타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육성방안연구』, 중소기업중앙회, 2014.
17. _____,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와 그 전제조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정책연구』, 2016, pp. 45-80.
18. _____,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의미와 개념 및 실체 그리고 정부역할에 대한 고찰,”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경제실현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8, pp. 35-94.
19. _____, “중소기업 중심 경제 실현 방안과 과제,” 발제문, 한국경제학회 · 중소기업연구원 공동주최, 2018. 12.
20. 조덕상, “기업간 자원배분효율성과 경제성장에 대한 함의,” 한국경제발전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18.
21. 조영삼, “대기업체제의 한계와 중소 ·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화,” 한국경제발전학회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2018.
22.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추진기구 구축방안』, 2015(내부자료).
23. _____, 『2017 중소기업위상지표』, 중소기업중앙회, 2017.
2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 1년의 성과와 과제,” 보도자료, 2018. 7. 23.
25.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 통계작성결과,” 보도자료, 2017.
26.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신무역통계개발』, 2017.
27. 한정화, “중소기업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9권, 2017, pp. 159-179.
28. 홍태희, “구조적 과잉축적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경상논총』, 제30집, 2004, pp. 129-151.
29. Aldrich, H., and E. Auster, “Even Dwarfs Started Small: Liabilities of Age and Size and Their Strategic Implications,” in L. L. Cummings and B. M. Staw. (Eds.), 1986.
30. Aron Perenyi, Christopher Selvarajah and Siva Muthaly, *The Stage Model of Firm Development: A Conceptualization of SME Growth*, 5th AGSE. 2008.
31. Era Dabla-Norris, Kalpana Kochhar, Nujin Suphaphiphat, Frantisek Ricka and Evridiki Tsounta,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n 2015*, IMF, 2015.
32. Fritz Vilmar, *Wirtschaftsdemokratie - Zielbegriff einer alternativer Wirtschaftspolitik Kritische Bilanz und Aktualit?t nach 40 Jahren*, 1999.
33. Ghoshal, Sumantra, Martin Hahn, and Peter Moran, ‘Management Competence, Firm Growth and Economic Progress’ in *The growth of the firm: The legacy of Edith Penrose*, C. Pitelis (ed.),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34. Hitt, M. A., R. E. Hoskisson, and R. D. Ireland,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Managerial Commitment to Innovation in M-form Fir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1 (S), 1987, pp. 29-47.
35. Per Davidsson, Frederic Delmar and Johan Wiklund, *Entrepreneurship and the Growth of Firms*,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UK. 2006.

A Discursive Approach of Meaning, Notion, Reality of the SME-centered Economic Structure and the Directions of Government Policy

Pyoung Ryang Wi*

Abstract

Moon Jae-in government showed the greatest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by suggesting ‘to build up the economic structure of SMEs as an alternative the Cheabol-large enterprise economic system’ and ‘to resolve the wage gap between SMEs and large corporations workers’.

To achieve this goal, the government should first establish an academic definition of the SME-centered economic structure. It can not be sustained without an academic foundation on philosophy and theory. Second, to combine new policies and ensure sustainability, the government must overcome the economic ideology that has dominated the Korean economy and build a third ideological system. Third, the reality of the SME-centered economic structure is to resolve the wage gap between large and small-sized business workers and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at this goal is also a solution to the dual structure of the economy. Finally, the enforcement of government policies should minimize the intervention of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groups by clearly setting the level of government involvement in each area and factors.

Key Words: small business, SME-centered economic structure, reform

JEL Classification: A1, L0

Received: Jan. 25, 2019. Revised: March 5, 2019. Accepted: April 30, 2019.

* Research Fellow, Economic Reform Research Institute, 101, Sajik-ro, Jongno-gu, Seoul 03041, Korea, e-mail: wiwe61@hanmail.net